

2900명 속인 '옵티머스 일당' 재판에

김재현 대표 등 3인 구속·사내이사 불구속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에 투자한다" 속여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2년여 동안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을 편취해 부실채권 등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22일 김 대표(49)와 2대 주주 D대부업체 이모 대표(45),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43)를 구속기소하고,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49)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종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만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 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

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김 대표 등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 등이 발생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옵티머스 이사를 겸임했던 윤 변호사는 매출채권 권리를 보유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양수도계약서'와 '채권양도조달통지서'를 주도적으로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옵티머스 측은 윤 변호사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몰랐으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앞에서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며, 이를 파악한 뒤에는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윤 변호사 측은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서류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속적 관계에 있는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금전적인 이유로 종속 관계를 맺고 있는 윤 변호사에게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범행을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또 윤 변호사 측은 옵티머스 사건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올해 초순쯤이며 처음부터 미리 알고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반면 검찰 측은 윤 변호사가 옵티머스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

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대표, 송 이사, 윤 변호사를 출국금지하고, 같은 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본사를 비롯 18곳을 압수수색했다. 30일엔 윤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7일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김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유나 기자

흥기로 친모 살해 10대 아들에게 '징역형' 구형

어머니를 흥기로 찢어 살해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2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흥기로 어머니를 찢어 숨지게 한 혐의다.

어머니는 흥기에 찢린 뒤 이웃 주민에게 연락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단기 3년 6월, 장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사건 당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증상이 발현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심야에 해루질 하던 70대 노인 극적 구조

심야에 바다에서 해루질을 하다 물에 빠진 70대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22일 0시13분께 고창군 심원면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물에 빠져 고립된 A씨(71·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지인 2명과 함께 조개를 채취하기위해 바다에 들어갔다. 물이 들자 일행들은 육상으로 나왔으나 먼저 나간 A씨가 보이지 않아 해경에 구조요청 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은 구조대와 고창파출소대원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했다. 구조당시 A씨의 모든 소지품은 바다에 떠 밀려간 상태로 긴박한 상황이었으며 헤드 랜턴의 불빛 덕분에 철쭉같은 바다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경미한 저체온증외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화장실서 성추행 시도하며 폭행한 40대

공공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4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상가 남녀공공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이 화장실의 문을 잠그려하자 A씨는 힘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성이 저항하면서 성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폭행으로 머리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화장실 밖에서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들은 일행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서 조사중 수갑 풀고 달아난 20대

사기 등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도주 19시간여만에 붙잡혔다.

22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A씨(23)를 붙잡았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에 인천 남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가 주거지 인근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A씨가 도주한 지 19시간여만에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지난 20일 오후 9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사기 혐의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체포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그를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임시 격리조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

"4년간 20명 피해 외면... '추행방조' 혐의 인정될 것"

"고충 호소했음에도 전보 등 적극적 조치 없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지난 4년간 20명에게 고충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추행피해가 지속되도록 방치했다면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추행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

상담소·한국여성전화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김재현 법무법인 윤세상 변호사는 "법에 서 '방조'는 정범의 실행 행위를 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

계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고 직장동료에게 텔레그램 문자와 속삭사진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예뻐서 그랬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매년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인사이동을 요청하면 '시장에게 인사이동 허락받아야'는 대답이 돌아왔다. 성고충, 인사고충을 호소해도 결국 전보조

치를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서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충을 호소했던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난 4년간 2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하기 전에 17명, 부서이동 후에 3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람들 중에는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이 문제를 책임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